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시끌'

광주시가 6·1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절차를 강행해 잡음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원장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서류심사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전문가 후보들이 면접심사에서 윤장현 시장 인수위 출신 후보들에게 뒤집힌 것으로 알려져 '정실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재)광주테크노파크는 현 원장 임기가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제4대 원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서류심사를 거쳐 6명의 응모자 중 4명으로 압축했으며 지난 6일 면접심사를 통해 광주시 고위관료 출신과 대학교수 출신 등 2명을 원장 후보로 확정했다. 2명 모두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인수위원회인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의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측근 인사들이다.

특히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2명은 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전문가들로 서류심사에서 3,4위를 기록했던 후보들이 이들을 제치고 최종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 안팎에서는 또다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측근인사 정실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바뀌 때마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을 놓고 말썽이 일었던 전례에 비추,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모든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장 승인기관인 중소기업부도 '지방선거 이후에 원장 선임이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을 강행하기로 하고 제4대 이사장인 윤장현 시장 명의로 오는 3월6일 이사회를 소집 요구해 놓은 상태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 2명을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이를 승인토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당연직인 광주시 간부와 광주시 추천 인사들을 감안하면 이사장의 임금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만 119개에 달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권한을 갖고 있어 원장 직은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시장 교체가 되면

윤 시장 인수위 출신...내달 6일 선임 강행 서류심사 1, 2위 후보들 면접서 뒤집혀 탈락 중소벤처부 '선거 이후로 미뤄야' 의견 무시

자기사리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심기 위해 한바탕 흥역을 치르는 게 다반사였다. 민선 6기 들어서는도 전임 시장 시절에 임명된 원장이 자리를 고수하다가 감사, 직원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이후 윤장현 시장은 제4대 원장을 정치적 인물이 아닌 전문가로 기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으나, 임기 말에 또다시 정치적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할 경우 시장 직무가 제한됨에 따라 서둘러 3월6일 이사회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장 선임 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소기업부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절차를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나 광주시가 외면했다며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원장 선임이)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전남도가 승인요

청했던 광안반곶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은 "선거 직전에 정실인사가 단행될 경우 또다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가 바뀐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중소기업부의 입장이 분명해졌다고 알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선거나 지자체장 인기와 맞물려 원장이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원장 선임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원장 선임과 관련해 모든 절차는 광주테크노파크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며 "원장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3월6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만세 운동 선봉에 선 대한독립투사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및 나라사랑 기념행사에서 안중근, 유관순, 김구 탈을 쓴 참가자들이 대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초등학교 입학생 709명 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70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만4468명으로 지난해 1만4893명보다 425명 줄었다.

광주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14년 1만5974명에서 2015년 1만4807명, 2016년 1만4207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생이 많았던 2010년 백호파들이 입

학하면서 반짝 증가했었다.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입학 예정자가 10명 미만인 곳은 충효분교(2명), 중앙초(4명), 임곡초(4명), 본량초(5명), 동초(7명), 양동초(7명), 동곡초(8명), 삼도초(9명) 등 8곳이다.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만5678명으로 지난해 1만5962명보다 284명 감소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2014년 1만6333명, 2015년 1만5384명, 2016년 1만5052명으로 매년 줄

다가 백호파 영향으로 지난해 증가했었다.

전남지역에서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총 4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증가했다.

신입생이 단 1명뿐인 초등학교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학교 통폐합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차주 행세' 문 열려진 화물차 턴 40대 구속

해남경찰서는 26일 차주 행세를 하며 주차된 차량만 턴 혐의(절도)로 신고(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이면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에 들어가 8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차 차량 3대에서 휴대전화 등 7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낮시간대 화물차 운전석 쪽에 몸을 기댄 뒤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하며 문을 열어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누룽지간 재판을 했다고 조사됐다.

여수서 한밤 아파트 화재...주민 180여명 대피

25일 오후 11시33분께 여수시 미평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62)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스스로 몸을 피하거나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대피해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경찰관 폭행·순찰차량 파손 40대 붙잡혀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 차량을 파손한 A(40)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12분께 인천 제물포역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순찰 차량을 발로 수차례 차고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장 B경사가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대부업체 직원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대부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모(33)씨 등 2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인 노씨 등은 경기 일대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부딪힌 뒤 허위로 입원하거나 타지도 않은 운전자가 탑승자를 사고 차량에 있던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자가 운전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차량에 태우지 않았던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고 피해자로 끼워 넣었다.

기숙사 룸메이트 체크카드 훔쳐 쓴 20대

직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체크카드를 훔쳐 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21일까지 A(32)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34차례에 걸쳐 1440만원을 부정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가져다 놓기를 반복했다.

비밀번호는 가깝게 지내며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